

사유자연휴양림도 공존돼야

조일형 / 한국임업신문 편집국장

사유 자연휴양림도 공존되어야 한다.

우리의 푸른산은 장엄하고 웅대하여 용장의 기상을 연상케 할 뿐만 아니라, 꿈과 낭만 그리움이 간직된 고향같아서 언제나 우리에게 친근감을 줌으로 참 좋다. 그러므로 사람과 산림은 뗄 수 없는 동반자 같기도 하다. 우리 인간이 옛부터 금세기에 이르기까지 산에 들어가는 것은 나무를 베어 목재를 얻고 땔감나무와 약초, 산채를 채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고도 산업사회의 팽창으로 매연과 분진, 소음으로 오존현상이 심화돼 우리 생활환경이 위해를 받아 심신이 피로하고 정서가 결함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활기찬 삼라만상과 대자연의 운치를 만끽하고 맑은 공기를 찾아 산을 찾는 서민의 군상이 대열을 이룸으로써 당국이 국유자연휴양림을 조성, 운영하고 사유자연휴양림도 때를 같이하여 실행도록 했다.

휴양림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심성순화와 자기성찰의 장으로서, 화랑도들이 숲속 심신수련을 했듯이 청소년들이 산속에서 호연지기를 수련케하고,

경관이 수려한 산책로·야영장·산림욕장 등을 통해서 산림을 이해하고 애착의 사고를 길러 년간 약3백만명이 휴양림을 이용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산림청에서는 청소년들의 숲속 수련활동을 지원하는 뜻에서 20명이상의 단체에 대하여 5월 10일부터 국유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주차장, 야영장 사용료를 무료로 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용 청소년들은 물론 청소년 순화와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환영할 만한다.

그러나 사유자연휴양림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인 것 같다. 공정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선심 행정조치라는 것이다. 국유자연휴양림 조성자체가 국비로 조성되었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수혜자가 입장료 등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휴양림 청소비, 관리비 등 제반운영비를 국민의 혈세인 국고에서 지출함으로 이용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결과가 됨으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사유자연휴양림 운영이 산주소득은 물론, 사회에 공헌하는 바 크다고 인정하여 금융지원을 하여 선도를 함으로서 나무심어 손해만 보던 산주들이 이에 고무되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 휴양림을 운영해 오던 중 당국의 이번 조치로 사유자연휴양림은 최후을 맞게 되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나무를 심어 부가가치를 얻고자함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당사자인 사유휴양림 운영자 의견수렴없이 일방조치는 결코 정당하지 못하며 자유경쟁 원리를 저해하는 조치라고 항변하는 그들이 잘못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한국임업신문 1999년 5월 20일자에서 발췌)